

2007. 9. 4.

보도참고자료

KDI 대외협력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사회적 자본: 정부의 역할과 IT

-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고,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신뢰 수준이 저하하고 있으며 그 저하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것이 확인됨.
 - 1982년부터 2001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0.36에서 0.27로 10% 가깝게 하락함.
 - 특히 50년대, 60년대에 출생한 세대가 상대적으로 빠른 사회적 신뢰의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, 이러한 경향은 남자들 가운데 두드러짐.
- 그러나 내전과 독재 등 우리와 역사적 경험이 유사한 스페인이 최근 들어 사회적 신뢰도의 하락 경향을 저지한 데 성공한 것은 우리에게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함.
 -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대기업·노조 등 힘 있는 집단에 대한 법 규범의 적용을 철저히 하면 사회 신뢰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임.
-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부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에 있어 신뢰를 제고하거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.
 - 정부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발전에 정부가 기여하는 방법의 하나임.
 - 시민 공동체 형태의 사회가 개인주의적 사회나 파벌주의적 사회에 비해 우월한 사회체제인 만큼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함.

-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 원인으로서는 정파적 편향성, 일방주의적 운동방법론, 과도한 이념성, 비전문성 등을 꼽을 수 있음.
 -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'정부가 주도하는 지원방식'에서 '사회적 지원체제'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또한 시민단체 스스로 독립성, 자율성, 자발성 등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우선 갖추어야 함.

- IT의 발전은 갈등현안과 관련하여 때로는 새로운 사회적 긴장을 낳는 장이 되기도 하나,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갈등관리체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.
 - 정부는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이기 위해 "인터넷 속의 시스템" 등 IT를 활용한 속의 민주주의 모델을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.

- IT 활용 정책방안으로 국회의원 능력평가제도 실시 등 '리더들에 대한 검증' 방법과 IT를 활용한 자원봉사 제도와 같은 '생활세계 속의 신뢰 회복' 방안이 제시되었음.

※ 문의: KDI 재정·사회개발연구부 조병구·박정후 (958-4164)
KISDI 미래전략연구원 황주성·박현주 (570-4307)

프로그램

13:30~14:00

등록

14:00~14:30

- 개회사 KDI·KISDI원장
- 인사말씀 기획예산처·정보통신부 장관
- 축사 변재일 의원(미래사회연구포럼 공동의장)

제 1 세션

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현황

14:30~15:00

- 사회 조병구 KDI선임연구위원
- 발표 "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국제비교"
김태종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
- 지정토론 안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

제 2 세션

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도 제고방안

15:00~16:00

- 사회 조병구 KDI선임연구위원
- 발표 "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향후 과제"
서중애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
- 지정토론 이숙종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
- 발표 "시민단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"
박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
- 지정토론 김종혁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

16:00~16:10

유식

「사회적 자본: 정부의 역할과 IT」 세미나 발표 논문 요약

『사회신뢰의 수준 및 추이에 관한 실증분석』

- 김태종 (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)

- 이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적 신뢰의 수준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변화의 경향을 확인해 보는 데 있음.
-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고,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신뢰 수준이 저하하고 있으며 그 저하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것이 확인됨.
 - 1982년부터 2001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0.36에서 0.27로 10% 가깝게 하락함.
 -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세계적으로 보면 중상위권에 들지만 미국, 일본,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.
 - 그러나 내전과 독재 등 우리와 역사적 경험이 유사한 스페인이 최근 들어 사회적 신뢰도의 하락 경향을 저지한 데 성공한 것은 우리에게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함.
- 2006년도 KDI 대학원 연구에서는 정부에의 신뢰와 사회 신뢰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정부 외에도 대기업, 노조 등 힘있는 집단에 대한 신뢰/불신 여부는 마찬가지로 사회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됨.
 -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, 대기업·노조 등 힘있는 집단에 대한 법 규범의 적용을 철저히 하면 사회 신뢰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임.
- 세대별, 성별로 사회적 신뢰도의 추이를 추적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남.
 - 특히 50년대, 60년대에 출생한 세대가 상대적으로 빠른 사회적 신뢰의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, 이러한 경향은 남자들 가운데 두드러짐.

『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역할』

- 서중해 (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)

-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부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에 있어 신뢰를 제고하거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.

-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측면과 관련성이 높은 정책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.
 - 정부는 노사간 협약, 투명사회 협약 등 등 상당수 사회협약을 추진해 왔으며 사회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로를 신뢰하는 경우 행위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.
 - 주민투표제, 주민소송제 등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.
 - 정보 공개 확대, 정책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접근성 제고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체계를 개선함.

- <비전 2030>은 사회적 자본을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,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과제들은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- 시민 공동체 형태의 사회가 개인주의적 사회나 파벌주의적 사회에 비해 우월한 사회체계인 만큼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함.
 - 그러기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, 상이한 정책영역에서 추진되는 정책 수단들 사이의 정합성을 살펴봐야 하고, 바람직한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.

『시민단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』

- 박병욱 (경실련 사무총장)

- 최근 몇 년간 시민단체의 정치·사회적 영향력은 커졌으나 시민단체에 대해 많은 비판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.
-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 원인으로는 정파적 편향성, 일방주의적 운동방법론, 과도한 이념성, 비전문성 등을 꼽을 수 있음.
- 특히 시민단체의 정파적 편향성은 시민단체의 신뢰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.
 -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정부·여당에 진출한 것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.
 - 먼저, 조직과 개인은 분리되어야 하며 전직과 현직은 구분되어야 함. 또한 정·관계 진출을 ‘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’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임
- 정부 재정지원의 경우 ‘정부가 주도하는 지원방식’에서 ‘사회적 지원체제’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한 예.
 - 이러한 지원제도는 정파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방안으로 판단됨.
- 시민단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단체 스스로 독립성, 자율성, 자발성 등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우선 갖추어야 함.
 - 분명한 정치적 목적과 정파적 성격을 갖는 정치단체들을 모두 시민단체라는 개념으로 묶어 시민단체의 정파성과 이념성을 비판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.
 - 정부와 정치권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적으로 동원하거나 배제하는 접근의 방식을 지양해야 함.
 - 아직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정예의 시민참여를 실질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.
 - 정부가 보유한 공익적 정보를 대폭 개방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야 함.

「사회적 합의수준 제고를 위한 IT정책」

- 서문기 (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)

□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갈등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,

○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틀을 기초로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합의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※ 사회적 합의수준의 제고는 지대추구 행위에 의한 부당이익을 제거하여 사회투명성을 높이고, 의사소통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가능함.

□ IT의 발전은 갈등현안과 관련하여 때로는 새로운 사회적 긴장을 낳는 장이 되기도 하나,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갈등관리체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.

□ 정부는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이기 위해 “인터넷 속의 시스템” 등 IT를 활용한 속의 민주주의 모델을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.

○ “인터넷 속의 시스템”은 구체적인 갈등적 사안에 대해 당사자, 정부당국,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의견 교환 및 의사결정 체계를 의미함.

○ 인터넷 속의 시스템은 국가와 사적영역의 지원을 받지만 독립적인 공공영역에 위치하며,

(1) 누구나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; (2) 논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사전 학습을 돕는 정보 아카이브; (3) 논점과 쟁점 정리; (4) 주요 토론 결과의 정리 등이 제시되는 공간; (5) ‘구조적, 규제적 조건’에 대한 통제; (6) 전문가 세션 또는 인공 전문가 시스템; (7) 정기적인 여론조사(객관적 모니터)가 필수적임.

[그림 1] 사회적 속의 시스템



□ “인터넷 속의 시스템”은 사회구성원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갈등을 합의형성으로 전환시키고 함께 하는 사회로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임.

「정보사회에서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」

- 최항섭 (KISDI 연구위원)

- 본 논문에서는 “정보사회에서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”이라는 주제하 리더십에 대한 불신, 생활세계 속의 불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가능한 IT 활용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.
 - 한국사회의 대표적 리더들인 정부관료, 정치인, 지식인 집단의 부정행위는 사회성원들의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,
 -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만 높게 되는 생활세계 속의 불신을 가져옴. 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시민들이 도와줄 가능성이 24.4%라는 KISDI의 조사내용은 이를 반영하는 결과임.
- 한국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IT 활용 정책방안이 제시됨.
 - “리더들에 대한 검증” 정책방안으로 ‘국회의원 능력평가제도 실시 및 결과 공개, 정치/경제 비리에 대한 인터넷 상 고발 및 보상 확대, 정치/경제 비리사건에 있어서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정보공개 확대, 정부관료 인사시 인터넷 활용 시민 모니터링’ 등을 제시하였고,
 - “생활세계속의 신뢰 회복” 정책방안으로 IT를 활용한 자원봉사 제도가 제시되었으며, ‘빈곤층 자녀 대상 화상야학, 농어촌 무료 화상의료 상담’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 행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IT가 최대한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.